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 10 통권 165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유연함과 인내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한금급 1.5조 원 찾아줬다
-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경쟁청구로 법인세 환급되는 경우, 과다납부된 법인세는 추가 고지될 농특세 가산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됨 (p.11)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 <임원의급여상여금보수와퇴직금의손금산입범위>

항목 구분	정관, 또는 주주총회 지급기준	이사회 결의로 손금산입범위
기본급여	보수총액 결정범위(지급기준)	정관범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정기상여금	보수총액 결정범위(지급기준)	결정된 금액은 손금산입함
성과상여금	보수총액 결정범위(변동계산식)	결정된 금액은 손금산입함
지배주주 임원 초과보수	동일직위범위내 금액은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동일직급 균등보수는 손금산입됨, 초과액은 손금부인
이익처분상여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임원보수지급 규정	결정가능범위 손금산입	범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비상근임원	부당행위부인의 손금산입	부당행위부인의 손금산입
퇴직금	정관이나 주총으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기준가능	이사회만으로는 지급규정 만들어도 손금부인 → 근로기준법상의 기본급(1년당 10% 손금산입)
임원퇴직보험료	퇴직보험 운영 금융회사 납입금액 (정관)	퇴직보험료 정관규정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57호 / 주간 2호

2024. 1. 10.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임원의 급여 상여금 보수와 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	표지
C E O 에 세 이	유연함과 인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사업부 매각 분리 - 농산물 매입 증빙관련 - 무상 수출 건 부가세 신고 문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문의입니다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절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금융투자소득세란 - 금투세 폐지·상법 개정 추진 내용	8 9
직장인 Survival	스스럼없이 마음을 여는 법 4가지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 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 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 는 것임 (서면법규기본-2550, 2023.05.24)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739, 2023.05.30)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되는 경우, 과다납부된 법인세는 추가 고지될 농특 세 가산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됨	11
세 무 정 보	-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14 17 19
회 계 정 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전 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 34 44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 유연함과 인내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부자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부도(富道) 1단 근(勤), 2단 검(儉), 3단 축(蓄), 4단 업(業)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부도 5단은 유(柔)다. 유연함 즉 부드러움이다.

노자의 통찰이다. “인지생야유약 기사야견강(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強)” 즉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드러움이요, 죽음이 바로 굳어짐”이라는 것이다. 곡선은 자연의 것이고 직선은 인간의 것이다. 예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설파했다. 그야말로 부드러워야 살아남을 수 있고 부(富)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찰스 다윈의 결론도 같았다. 모든 생물의 생존전략이 강대함에 있지 않고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함에 있다. 성공한 창업자중 성질이 불같이 급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재빨리 수습하는 스피드와 유연성이 뒤따른다. 그것은 그만큼 삶에 대해 겸손하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겸손해서 얻는 복이 세 가지 있다.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첫째 발견, 둘째 발명, 셋째 변혁이라는 복이다. 미국 부의 대표적 상징인물인 록펠러가 바로 석유 재벌이었다. 노년에 그는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면서 미국자본주의를 성숙시켜 나갔다.

벤처기업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세계 표준화 시키면서 막대한 부를 이뤘다. 그런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다.

창조적 자본주의를 제창하면서 자선사업에 몰두할 것을 천명한 현대의 영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한국의 벤처기업 역사는 너무나 초라하다. 큐닉스에서 메디슨과 삼보컴퓨터에 이르렀지만 모두 부도를 맞았다. 유연하지 못했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한국의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권력과 야합해서 특혜를 누리거나 분식회계에 따른 부정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부의 획득 때문이다. 슬픈 일이다.

부도 6단은 인(忍)이다. 인(忍)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알 부자 동네인 윈저우 기업인들의 무수한 사례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들의 ‘츠쿠나이라오(吃苦耐勞·흘고내로/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참아내는)정신’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따로 집

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공장 2층의 작은 공간에 침대를 놓고 가족과 함께 산다. 퇴근도 없다. 낮에는 물건을 만들거나 바이어를 찾아 댄다. 밤에는 디자인 작업을 한다.

인(忍)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시간경영이다. 강태공은 80평생을 기다렸다. 그런 후 나라를 경영하는 위치에 오르고 뜻을 폈다. 부귀도 따랐다. 함께 기다리지 못하고 집을 나간 부인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물을 끓이면 100도까지 기다려야 수증기라는 기체로 변한다. 그것을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 부른다.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브랜드인 스페인의 ‘자라(ZARA)’는 스피드경영의 놀라운 사례다. 세계 어디서나 2시간 내 새로 디자인된 제품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역으로 시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인(忍)은 목표를 향해 두박두박 가는 일이다. 그래서 프로의 모습이다.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다. 참 부자의 길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9일 (금)	1월 2일 (화)	1월 3일 (수)	1월 4일 (목)
미	달	러	(USD)	1289.40	1289.40	1299.30	1308.80
일	본	엔	(JPY)	912.66	915.60	914.55	914.76
영	국	파	운 드	(GBP)	1641.79	1641.92	1639.85
캐	나	다	달 러	(CAD)	974.64	973.76	975.38
홍	콩	달	러	(HKD)	165.06	165.12	166.24
중	국	원	(CNH)	180.84	180.84	182.63	183.19
유	로	화	(EUR)	1426.59	1423.63	1421.82	1429.86
호	주	달	러	(AUD)	880.08	878.34	879.11
싱	가	폴	달 러	(SGD)	976.86	976.71	979.7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9.85	280.61	282.30

## 사업부 매각 분리

- Q** 당사는 현재 A사업부와 B 사업부 가 있으며 23년 6월에 B 사업부를 매각하여 분리 하였습니다.
1. A 와 B 회사 간의 거래 중에서 , 일부 계약 미 분리로 인하여 A 사업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 처리하고, 이를 B 사업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 Recharge 하였습니다. 이를 부가세 신고 시에 양쪽 회사는 수입신고제외 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A와 B 회사 사이에 사업부 매각으로 인하여 판매한 고정자산과 선지급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발행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로)
- 이때,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매출로 신고하고 선지급에 대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란에 넣으면 될까요? ( 현재 당사는 일반 고정자산 매각 대금은 수입금액 제외 하지 않고 매출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

- A**
1. 수입신고제외란이 아닌 다른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2. 포괄사업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농산물 매입 증빙관련

- Q** 농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계산서 등의 발행을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판매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거래한 품목, 수량, 단가, 금액등이 기재된 농어민 매입확인증으로 대신 비용증빙처리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A**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산서가 없어도 송금명세서 등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농어민 개인이 아니고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무상 수출 건 부가세 신고 문의

**Q** 미국에서 일본으로 발주가 나고 invoice 및 지급도 미국, 일본에서 거래 하는 건인데 당사가 중간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물건을 받아서 수입 신고를 하였고, 무상으로 수출 신고하여 핸드 캐리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 및 매출 과세 표준에 반영 하여 수입 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A**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 등에 영세율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문의입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조회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당사에서 신고 및 제출해야 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다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이 당사가 홈택스 조회내역보다 적을 경우)

**A**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액을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실제의 상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대금 청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지만, 대금청구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 및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

세금계산서의 합법적인 선발급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이 실제 공급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이 인정되며,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니게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가 적용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대금 지급없이 세금계산서 선발급후 7일내 대금받는 경우도 가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선발급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대금지급이 7일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화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금융투자소득세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
기본 공제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해외·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50만원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는 27.5%



## 금투세 폐지·상법 개정 추진 내용

구분	현재	추진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주식·펀드 등으로 연 5000만원 넘는 차익 얻으면 22~27.5% 양도세 부과 (2025년 1월 시행 예정)	관련 소득세법 조항 폐지 (시행예정 규정 없음)
상법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직무 수행(이용우 의원안)</li> <li>•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 직무 수행(박주민 의원안)</li> </ul>



##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

조세 · 금융 ·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대해 증여세 최대 1억5000만원 공제(양가 증여시 최대 3억원)</li><li>-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li><li>- 전용계좌로 청약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발행</li><li>-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 신설해 공공 · 민간분양 포함 7만 가구 공급</li><li>-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li><li>- 다자녀 특공 기준 민간분양에서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li><li>-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li><li>- 역세권 재건축 · 재개발 정비구역 용적률 기존 1.2배로 오나화</li></ul>
복지 ·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둔 부모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지급</li><li>-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li><li>-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산후조리비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 요건 폐지</li><li>- 소비자 요청시 요양기관(병 · 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10월 25일부터)</li><li>-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li></ul>
산업 ·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 과세되는 경우 차액분 추가세액 납부</li><li>-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각각 확대</li><li>- 가업승계시 저율과세(10%) 구간 60억원에서 120억원,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li><li>-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일부 환급</li><li>-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li></ul>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횟수 비례해 요금 환급해주는 'K-패스' 5월 도입</li><li>- 취득가 8000만원 넘는 공공 · 민간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li><li>-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구간 개통</li></ul>



## 스스럼없이 마음을 여는 법 4가지

### 1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

동료와 잘 안 맞다고 느끼거나, 가족과 의견이 다르거나 이런저런 갈등과 마찰에 상처를 입는 일이 많다. 이럴 때 '상대가 이런 부분만 고쳐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법은 딱 하나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상대가 바꾸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거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 2 전투태세를 누그러뜨리자

누군가와 의견이 갈릴 때면 '둘 다 맞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생각이든 그 사람이 처한 입장, 성장과정, 형편, 절차, 배려, 두려움 등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맞는지 아무리 논쟁을 해봐도 절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상대의 의견을 받아주는 것은 논쟁을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3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자

우리는 무심코 '나를 소중히 여기면 알아서 다 해줄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격 차이나 남녀 차이, 생각 차이도 있어서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알아주기란 쉽지 않다.

사실 상대방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보다는 용기를 내어 명확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자.

### 4 천적이야말로 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자

서로 사랑했던 연인도 막상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면 매력적으로 여겼던 부분이 오히려 못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매력적인 상대와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을 상대가 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거꾸로 말하면 상대의 '천적'스러운 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최고의 커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으로 돌리면 무서운 사람'이 있다. 천적을 받아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면 무서울 것이 없다.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되는 경우,  
과다납부된 법인세는 추가 고지될 농특세 가산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됨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기본-2550, 2023.05.24

### Ⅰ 질 의

- 갑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규정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누락
- '22년경 갑법인이 위 세액공제 누락을 이유로 경정청구한 결과, 청구 인용한 과세관청은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감액 결정 후 국세환급금 97백만원 환급
-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감액결정 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면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4백만 원을 가산

### 질의

-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과다 납부된 법인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  
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금융세제과-31, 2023.01.17

### Ⅰ 질 의

-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판단 규정

### Ⅰ 회 신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4397, 2023.04.19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 개업하여 업종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함

질의

- 금융 및 보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739, 2023.05.30

### 질 의

- △△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1. △△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 회 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이 되는 것이고, 준공인가일 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해당 시설 등이 사용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 다만, 특별감독,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국세청, 기업 지원체계 신설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를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한국의 경우 필라 1은 국제합의 등의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필라2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내의 경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19일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소득세 50%) 적용 기간도 10년으로 종전의 두 배나 늘어났다.

#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양도소득세도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3.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 23.4월부터 12월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

적용 요건	설명
① 실지거래가액 존재	• 등기부등본에 취득·양도 실거래가액이 모두 기재된 자산
② 연도 중 최초 양도	• 연도 중 최초 양도한 부동산 * 1년에 2회 이상 양도한 두번째 물건은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제외
③ 단일 부동산	•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된 부동산

\* 토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하여 제공

-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하여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

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 아울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2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1과세기간(1.1.~12.31.)동안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입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나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수정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됩니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좀 더 일찍 발송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이 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 원 찾아줬다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 |



-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안내하는 등



-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참 고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개요

### □ 추진 배경

-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최근 10%~20%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민간서비스 성행

### □ 추진 내용

- (환급대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 (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 원 미만이면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미만

-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1)로 환급세액까지 계산되어 있는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고2)

1) 수입·공제금액, 환급받을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2) 홈택스 신고 첫 화면에서 환급세액 확인과 환급계좌 입력 가능

### □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 현황('22~'23년)

(만 명, 억 원)

안내기간	합 계	'22.5월 (정기)	'22.9월 (기한후)	'23.5월 (정기)	'23.8월 (기한후)
인 원	629	236	44	311	38
환급액	15,157	6,118	5371)	8,029	4732)

1) '22.9월~'23.7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22.12월까지 397억 원 환급

2) '23.8월~12월 신고분 환급액이며, 기한 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액은 증가 예정

#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으며,
  -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입니다.
  -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분	세금포인트 사용처
여가문화	①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②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유통센터), ③국립중앙박물관, ④국립세종수목원, ⑤국립백두대간수목원, ⑥국립생태원, ⑦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⑧행복한 백화점, ⑨판판면세점
세정지원	⑩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⑪소액채납자 재산 매각 유예, ⑫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수출지원	⑬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 또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그 결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



선하였다고 평가받아 '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정책 추진부서에 수여(매일경제신문 주관, '23.12.20.)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참고 -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세금 포인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 세목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여 기준	납부세액 10만 원 당 1점
세금 포인트  혜택	여가 문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5% 할인 구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 (개인)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 1천 원 할인 (개인)
	세정 지원	•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오프라인 몰에서 5% 상당 할인 구매 ※ '24년 중 순차적으로 모바일 쿠폰 제공 예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개인·법인) -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p당 10만 원)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 유예 (개인·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1p당 10만 원)
수출 지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개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제공 (법인)	
세금포인트 조회·사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 1

## - 주요 내용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정)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규정화하였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평가·보고 기준은 '24.1.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 I

## 개정 배경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23.5.2일 「외부감사규정 (§6 ④)」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 경영진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 내실화,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의 일환]



-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존재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9.)의 일환 ]

\* ('23년) 직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9년) 5천억원 이상 → ('30년) 전체

## II

## 주요 내용

##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지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 (평가 및 보고 기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을 보완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 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설명

\* ① 재무보고 위험과 통제 식별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 ③ 통제의 미비점의 평가 → ④ 평가 결과 보고

## &lt;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주요 내용 &gt;

## ◆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1 재무보고위험 식별

- 재무보고의 양적·질적요소 고려
- 부정위험 고려

## 2 통제 식별

- 핵심통제 선정
- 전사적 수준의 통제 효과성 고려
- IT 일반통제

## 3 통제 효과성 평가

- 통제위험 평가
- 평가 증거자료 결정
- 평가대상 선정
- 설계 효과성 평가
- 운영 효과성 평가

## 4 평가결과 문서화

- 경영진의 평가 근거 문서화
- 결론도출 근거 문서화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보고 [→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

1 미비점 평가	2 미비점 조치	3 보고서 작성	4 운영실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결합하여 중요 취약점인지 고려</li> <li>• 양적·질적요소 고려</li> <li>• 보완통제 영향 평가</li> <li>• 미비점이 중요 취약점 인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시시정체계 마련</li> <li>• 개선방안 감사(위원회) 보고</li> <li>• 감사(위원회) 권고 고려하여 조치</li> <li>• 사후 이행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효과성에 대해 결론</li> <li>• 운영실태보고서에 내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총·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li> </ul>

◆ 감사(위원회) 역할 : 1 경영진과 독립적 입장에서 운영실태 평가

2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3 미비점·취약점 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업계 논의를 거쳐 이건을 해소하고 기준 (문단14)에 명확히 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대상(기준 문단14) >

- (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사업단위
-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 (4)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 절차와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을 규정

< 보고서 신설·추가 사항 >

운영실태보고서 [ 대표이사 → 주총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 → 이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포함</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li> </ul>





- (시행시기) '24.1.1일부터 시행하되,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의의 모범 기준 및 적용기법을 '24회계연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 부여

## 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 평가·보고 대상범위 ①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②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③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공하여 실무적용상 혼란 해소
- (양적기준) 업계 실태파악 및 협의를 통해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 (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 (2단계), 8배 (3단계)' 등으로 제시
  - (질적기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기준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
    - \* 예) 양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정위험이 높거나,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이 낮은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대상에 포함
  - (참고사례) 상장회사와 감사인들이 가이드 라인을 쉽게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 >

선정절차		양적 기준	질적 기준 (예)
1단계	유의적 부문 선정	매출 등 주요 지표의 15% 초과	부정위험이 높은 부문 등
2단계	개별적으로 중요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중요성 금액의 4배	그룹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등
3단계	他 부문 합산시 중요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중요성 금액의 8배	부문의 중요 왜곡표시위험 수준 등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기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함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제고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배포·안내하는 한편,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

## 참고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전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가이드라인

2023. 12. 29. 제정

####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대상범위를 선정하는 절차 및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시하여 회사가 효과적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추가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용어의 의미 등에 상충이 없는 한 금융감독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이란 회사가 부문과 관련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해 양적·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부문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 나. '유의적 부문'이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과 '특정 위험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재무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부문을 말하며, 특정 위험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이란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유의적인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말한다.

- 다.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란 개별 부문에서 식별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인 위험은 아니더라도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말한다.
- 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란 식별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인 위험이 아니더라도 둘 이상의 부문을 합칠 경우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또는 수행중요성) 및 유의한 계정과목과 주식정보(이하 “유의한 계정과목 등”)를 선정한 뒤,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부문의 범위를 선정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 하는데 적용된다.
4.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Scoping)을 위한 절차는 유의적 부문을 선정하는 절차(1단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선정하는 절차(2단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부문과 합칠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선정하는 절차(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을 선정한다는 것은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된 부문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를 평가·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보고 범위는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Full scope)', '부문의 특정 프로세스(Specific scope)', '그룹 차원의 통제 프로세스(Limited scope)'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Full scope) :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특정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문 및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 연결재무제표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전체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부문의 특정 프로세스(Specific scope) : 특정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문 및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 연결재무제표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 중에서 특정 계정과목 등에 한정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상 특정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만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다. 그룹 차원의 통제 프로세스(Limited scope) :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부문에 대해 그룹 수준의 위험평가와 부문의 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룹 차원의 통제를 통하여 잔여 부문의 위험에 대응한다.

5. (가이드라인 준수 효과) 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를 선정하고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하여 이사회 등에 보고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 및 감사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회사의 평가·보고 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유의적 부문 선정(1단계)

6. 회사는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또는 특정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함에 있어 양적 또는 질적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어떤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양적 판단기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총자산, 세전손익 등 재무지표 중에서 주요 재무지표를 선정한 뒤, 주요 재무지표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우선적 고려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부문의 업종, 규모, 그룹 구조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등을 고려하여 주요 재무지표의 15% 보다 높거나 낮은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재무적 지표를 고려하여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수의 재무적 지표를 이용하여 유의적 부문을 선정할 수 있다.

나. (질적 판단기준) 회사는 특정 위험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적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부문인지를 양적 판단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부문에서 식별한 유의적 위험이 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
- (2) 그룹 수준에서 결정한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부문
- (3) 규제 목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 (4) 명확한 사업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부문
- (5) 신규 취득한 부문
- (6)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전기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한 부문
- (7) 부문 경영진의 회계 관련 적격성이 부족한 부문
- (8) 부정위험이 높은 부문
- (9) 기타 회사가 특정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부문

#### 제3장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선정(2단계)

7. 1단계에 따른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개별적으로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양적 판단기준) 1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인 경우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부문으로 포함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이지만 그 발생원인, 성격 등을 볼 때 연결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는 2단계 관련 부문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질적 판단기준) 회사는 2단계 관련 부문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질적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부문인지를 양적 판단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유의적인 변화(예: 양수, 자산취득 등)가 발생한 부문
- (2) 그룹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 부문
- (3)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 (4) 내부감사기능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부문
- (5) 그룹 차원에서 수행한 분석적 절차를 통해 비정상적인 변동이 식별된 부문
- (6) 기타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

제4장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선정(3단계)

8. 1단계 및 2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개별 잔여 부문이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잔여 위험으로 인해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양적 판단기준) 회사는 1단계 및 2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대상 부문으로 포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부문의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상이지만 그 발생원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결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단계에 따른 부문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는 위의 중요성 금액과 더불어 아래의 양적기준을 추가로 고려할 수도 있다.

- (1) 잔여 금액이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2) 특정 개별 부문이 유의한 계정과목의 잔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3) 잔여 금액을 구성하는 부문의 개수

나. (질적 판단기준) 회사는 3단계 관련 부문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질적 판단기준을 양적 판단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부문의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 (2) 부문에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수준

- (3) 특정 부문에서의 왜곡표시 위험이 다른 부문에도 해당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
- (4) 기록과 정보처리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 (5)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과 부문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통제환경의 효과성
- (6)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그룹 차원 통제의 주기, 시기 및 범위
- (7) 기타 잔여 부문이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사례 >

[ 1단계 ]

<b>사례 1</b>	<b>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유의적 부문</b>
감사기준서 600(유의적 부문) A5는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A5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선택한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은 백분율 값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사례 2</b>	<b>주요 재무지표의 15%보다 높거나 낮은 백분율 적용</b>
A사는 14개의 부문(중속회사)을 보유하고 있다. 부문1은 주요 재무지표의 12%, 부문2는 10%, 나머지 부문은 각각 2%~8% 사이를 차지하고 있다.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없으나 A사는 그룹 구조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주요 재무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1과 부문2를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b>사례 3</b>	<b>다수의 재무지표 적용</b>
B사는 매출액의 변동성은 낮으나 세전손익의 변동성은 높은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매출액을 주요 재무지표로 선정하였으나, 주요 부문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세전손익과 매출액 등 다수의 재무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무지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의적 부문으로 판단하였다.	

<b>사례 4</b>	<b>부문의 유의적 위험이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b>
C사는 제조업 부문과 보험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계약부채의 중요성과 보험준비금 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 부문의 유의적 위험이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매출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할 때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업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를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5	부문의 유의적 위험이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p>D사의 부문1은 그룹의 주요 생산법인으로서 원가 집계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인 재고자산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p> <p>부문1은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문1의 원가 및 재고자산 등 특정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p>	

사례 6	그룹 수준의 유의적 위험이 부문에도 관련된 경우
<p>E사는 손상된 재고자산이나 장기간 이동이 없는 무이동 재고자산을 완전하게 식별하지 못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의 추정치 금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위험을 그룹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으로 판단하였다.</p> <p>E사의 부문1은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 비중이 높으므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계정과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부문1의 특정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p>	

## [ 2단계 ]

사례 7	부문의 개수와 상대적인 재무적 규모 고려
<p>F사는 100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의 규모 및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11개의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였다. 유의적이지 않은 89개의 부문 중 85개의 부문은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연결재무제표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측정기준)의 9%를 차지하고, 나머지 4개 부문은 7%를 차지한다.</p> <p>F사는 7%를 차지하는 4개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일부가 연결재무제표 중요성의 4배수를 초과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p>	

사례 8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한 부문
<p>G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당기 중에 호텔 및 골프장 부문을 인수하였다. 신규 사업 부문이 G사의 주요 재무지표인 연결재무제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그룹의 유의적인 위험에도 해당되지 않아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p> <p>그러나 G사는 신규 사업 부문이 기존 사업 부문과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신규 사업과 관련된 거래유형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신규 사업거래 프로세스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p>	

사례 9	그룹 공통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 부문
<p>H사는 소비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100개의 국가에서 지역 총판과의 독점판매계약(B2B 거래)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 미주 지역에서는 대리점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활동(B2C 거래)을 영위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 및 거래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부문의 매출액은 연결 매출액의 3%를 차지하고 있다.</p> <p>H사는 B2C 거래가 영위되고 있는 부문을 부문의 독특한 중요한 사업이나 프로세스라고 보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B2C 거래 프로세스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p>	

사례 10	그룹 공통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 부문
<p>I사는 20개의 부문 중 1개의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문은 단독으로 다른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I사는 ERP시스템에 대해 모두 공통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부문은 독립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I사는 해당 부문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p>	

사례 11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경우
<p>J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그룹 수준에서 내부거래 금액과 미실현 손익, 내부거래 관련 계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해 그룹의 연결시스템상 내부거래를 집계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부문의 경우 내부거래 입력에 있어 오류 및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p> <p>이에 J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모니터링과 관련된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특정 거래유형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식별하여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p>	

사례 12	그룹 차원 분석적 절차로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된 부문
<p>K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 선정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수준에서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특정 부문이 매출채권 잔액은 감소하였으나 회수기일이 전기 대비 급증하였고, 미착재고의 변동과 외상매입금의 변동 양상이 과거 비율과 상이하게 변동되었음을 식별하였다.</p> <p>K사는 특정 부문이 K사의 주요 재무지표인 연결재무제표 자산의 3% 수준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식별되지 않았으나, 분석적 절차 수행 결과 비경상적 변동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문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p>	





## [ 3단계 ]

**사례 13**      **부문의 개수와 상대적인 재무적 규모 고려**

L사는 200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의 규모 및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45개의 부문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155개 잔여 부문의 합계금액은 모두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내이며,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각각 잔여 부문의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또한, 잔여 부문의 합계금액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측정기준인 연결재무제표 자산의 9% 수준이다.

이에 L사는 155개 잔여 부문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14**      **부문의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및 금액 고려**

M사는 3개의 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부문1은 수행의무가 다수인 거래 및 진행률 매출 등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복잡한 매출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M사는 부문1이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15**      **기록과 정보처리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N사의 특정 부문은 데이터가 중앙에서 추출되는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부문이 수정하는 전표가 없으며, 전표 거래처리에 관여하는 직원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N사는 해당 부문이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문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16**      **그룹 차원 통제의 주기, 시기 및 범위**

O사는 총 30개의 종속회사 중 12개의 부문을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18개의 잔여 부문을 총 4개의 세부 그룹으로 식별하여 각 세부 그룹의 양적 및 질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으며, 2개의 세부 그룹을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O사는 유의한 계정과목별 잔여금액의 유의성과 그룹 차원 통제의 효과성 및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각 세부 그룹의 중간 지배회사에서 운영중인 그룹 차원 통제의 효과성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그룹 차원 통제를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예측불가능성의 요소를 포함하여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을 순환기준에 따라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례 17	종합 사례
<p>P사는 총 3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P사는 내부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중요성 기준을 설정하고 각 계정과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우선 실시하였다. 이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대상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p> <p>스코핑 1단계 절차인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하기 위한 양적 판단기준으로 회사는 매출액을 선정하고 매출액이 5%를 초과하는 부문(종속회사)을 우선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종속기업인 ㉠사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므로 1단계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로 그룹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문 2개(㉡사, ㉢사)를 재무적으로 유의한 부문으로 판단한 뒤, 각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계정과목)를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질적 판단기준(부정위험 등)을 적용하여 ㉡사를 1단계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고 부정위험 등과 관련된 ㉢사의 프로세스(계정과목)를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p> <p>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2단계)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유의한 계정과목 중 중요성 금액의 4배수를 초과하는 5개 종속기업의 22개 프로세스(계정과목)를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그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부문, 내부감사기능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부문(계정과목)의 특정 프로세스를 추가로 2단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p> <p>3단계 절차로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1단계 및 2단계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계정과목)의 합계가 중요성의 8배수를 초과하는 3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잔여 부문의 합계가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특정 개별 부문이 유의한 계정과목의 잔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3개 종속기업의 5개 프로세스를 추가로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수준 등 질적 판단기준도 적용하여 3단계 평가·보고 대상부문(계정과목)을 선정하였다.</p>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4. 1

## 주요 내용

-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 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	사업 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p8)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p9)			회계법인	
③ 비상장주식회사 (☞ p10)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④ 유한회사 (☞p11)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 (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I 개 요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
    - \* '23년의 경우 전년(189사) 대비 40.7% 감소한 112사가 감사인 선임기한(96사)·절차(16사) 위반으로 지정
  -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2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 41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②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기준 안내

기 준	현 행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table border="1"> <tr> <td>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or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이상) 소속회사</td><td>1천억원 이상 (현행 유지)</td></tr> <tr> <td>② 이외 비상장주식회사</td><td>5천억원 이상 (기준상향)</td></tr> </table>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or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이상) 소속회사	1천억원 이상 (현행 유지)	②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5천억원 이상 (기준상향)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or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이상) 소속회사	1천억원 이상 (현행 유지)				
②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5천억원 이상 (기준상향)				
※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현행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적용					

- ③ (비상장주식회사)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 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제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

-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④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음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p8)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p9)			회계법인	
③ 비상장주식회사 (☞p10)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④ 유한회사 (☞p11)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 (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⑤ (주요위반사례) 아래 주요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특히,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참고1)

주요 위반 사례

- ① (선임기한 위반) '21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는 '21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600억원으로 '22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2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가'회계법인으로 '22.4.30. 체결함
- '22년 결산결과 '23년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A사는 작년과 유사한 시점인

'23.4.29. 내부적인 감사인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외부감사인을 '가'에서 '나' 회계법인으로 변경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함

➡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므로 선임기한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3.2.14.)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선임

② (선정절차 위반) '21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기타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2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B사는 급격한 성장과 합병으로 '22년 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인원 수 위반) F사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주주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외부전문가 2명으로 총 7인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에서 최대 6인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으로 구성

④ (기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

○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를 사외이사\* 자격으로 선임하여 위원요건 위반

\* 외감법상 사외이사는 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선임·등기된 사외이사를 의미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자격요건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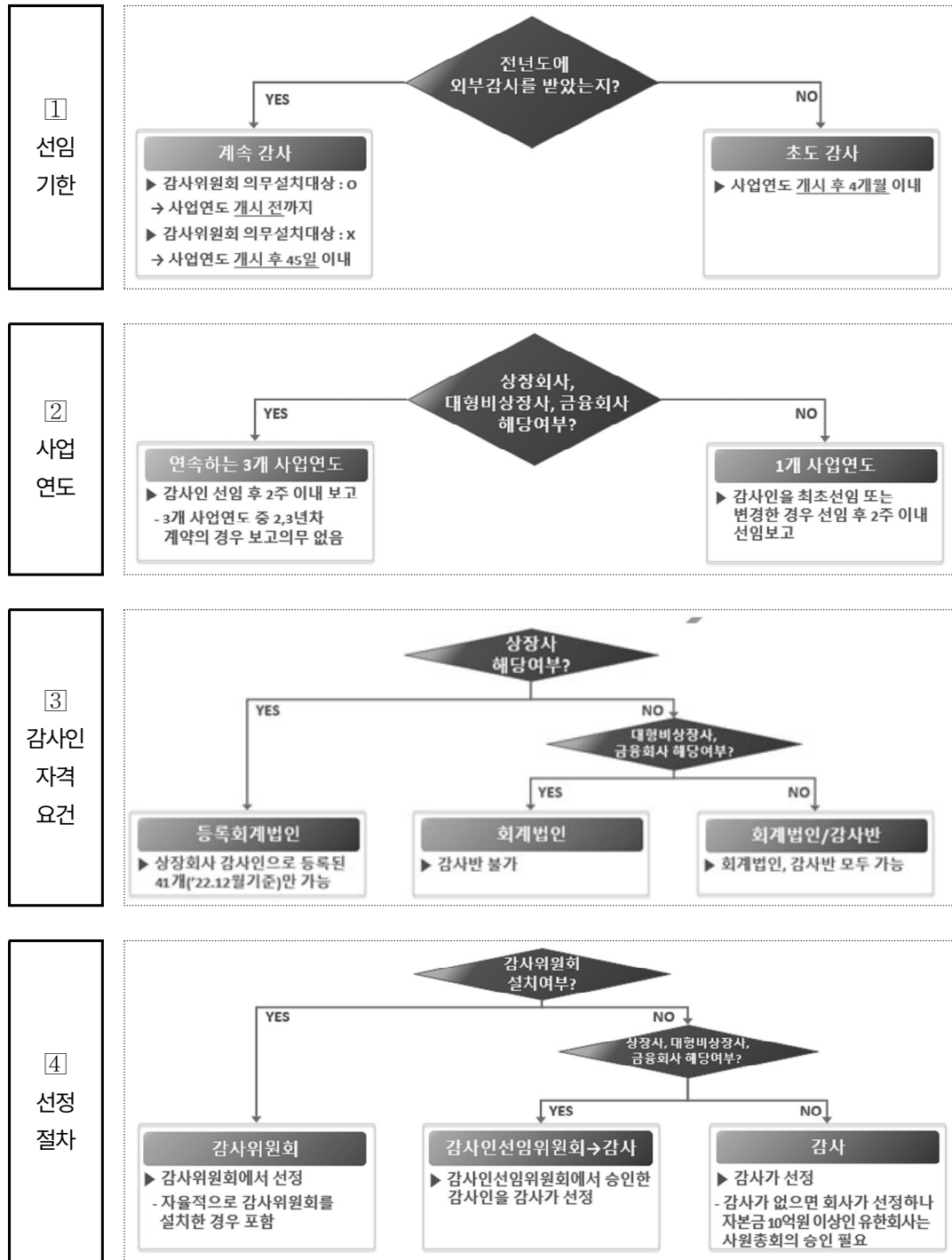
###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24.1월)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상담을 의뢰할 필요



## 붙임 1 -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 붙임 2 -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 §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3.12.31.) 감사인 선임
- ※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함
-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1개)만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3.12.31.) 감사인 선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참고1, p12)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 예) 회사가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3 비상장주식회사

-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
  - ※ 만약 자산 등 규모 축소로 외감대상에 포함될지 불분명한 회사는 제외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결산이 종료된 후 제외신청 가능
-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4 유한회사

-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
  -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 1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5인 혹은 6인으로 구성되며, 6인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함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시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

## 참고 2 - 선임보고 방법 안내

---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76번)를 참고
-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선택→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

#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 1

## - 주요 내용 -

◆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 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 I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23.6월)' 및 '외감규정 개정('23.9월)'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

II 주요 내용

1 감사인 기업간 감사시간 등 합의과정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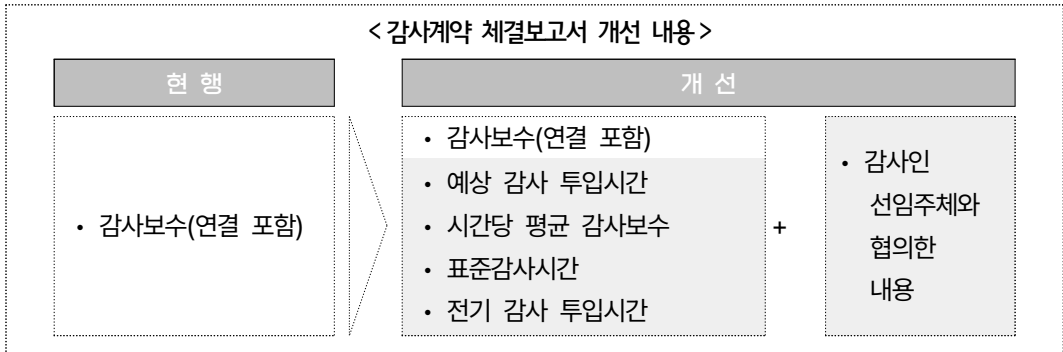
- (문제점) 감사계약 체결시 보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
- (개 선) 감사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감사계약 체결보고서 서식 개정)
  -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 감사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4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예시) >

감사참여자 감사단계별 예상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세무, IT 등 기타 전문가	합계
		담당 이사	등록 CPA <sup>주1)</sup>			수습 CPA		
투입 인원수								
재무제표 감사								
분·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연결감사								
기타								
합계								

\* 주1) 직급(연차)별로 기재하되 등록회계사는 0~3년, 4~9년, 10년이상으로 기재

- 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예상 감사시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요구
-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충실히 협의하도록 유도



□ (시행일) '23.12.29.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고

□ (문제점) 감사인 지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

\* 지정감사인이 동일감사인 연속지정 등 특정된 경우 외에는 기업을 자산 순서에 따라 감사인은 지정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해당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

□ (개 선)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

- (적용산업)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
  -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에는 건설, 금융, '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

< 업종별 시행 시기 >	
'24.1.1. 시행 (4개 산업)	'25.1.1. 시행 (7개 산업)
<b>①</b> 건설업 등 수주산업 건설  <b>②</b> 은행 및 저축은행업 금융 <b>③</b> 보험업 금융 <b>④</b>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금융	<b>①</b>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b>②</b>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b>③</b>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b>④</b> 운수 및 창고업 <b>⑤</b>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b>⑥</b> 소프트웨어 개발업 <b>⑦</b>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지정절차) 상기 산업에 속한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			
1 지정기초자료 제출 (회사, 감사인→금감원)	2 지정감사인 통지 (금감원→회사,감사인)	3 산업전문성 분류	4 재지정 신청 (회사,감사인→금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기재 * '불필요' 또는 미기재 시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li> <li>• 감사인 : 산업전문가 보유여부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 회사가 희망하는 전문성 업종을 지정감사인에게 통지</li> <li>• 회사·감사인 : 산업전문가의 업무배치 등에 대한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인이 산업전문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 지정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 감사인 : 보유 전문가보다 지정회사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li> </ul>

- (산업전문성 기준)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산업전문가를 산업전문성 필요 업무에 배치하여 관련 감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서명

#### <산업전문가 기준>

- 가.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 나. 최근 10년 이내 해당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다. 최근 10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해당 산업에 관한 분석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라. 해당 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마.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바. 가.의 감사·비감사용역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마.의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대 효과

-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의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되고, 감사인 · 기업 간 협력이 내실화되어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수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감사인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제시한 감사시간과 보수의 합리성을 기업에 적극 설명 · 협의할 필요
  - 이와 함께 산업전문가 육성 · 확보 등 감사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 기업들도 감사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계약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등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

## IV

##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시 기업 · 감사인 간 협의 활성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정
    - 제도 시행 ·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필요 사항을 보완하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외부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內 열린창구에서 접수 가능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